

결론 못 낸 끝장토론...국민의당 '뒤끝 설전'

“당 분열 막자” 결론에도 안 “통합 의견수렴 계속” 호남계 “안 리더십 의문” 찬·반 의원수 해석도 제각각

국민의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도통합론에 대해 ‘끝장토론’을 한 결과, 당 분열은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어설피론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이날날인 22일 곧바로 설전을 이어갔다. 특히 안철수 대표 측이 통합카드를 밀고 나갈 태세를 보이자 호남 중진들은 세 대결에 나설 태세여서 내분이 쉬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남중진 반발=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정당 정신을 지키면서 의원 확대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의 여론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는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니다”며 “원의 지역위원장이 훨씬 많다.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지지자와 당원 간담회를 통해 진솔한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에 대해 당내 국회의원들에게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통합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친(親)안철수계 지도부 인사들도 중도통합론 불씨를 살리는 데에 집중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어제 연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나”라면서 “연대·통합 찬반을 묻는 정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원 분포상 안 대표 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으로 해석된다.

호남 중진들의 반발도 계속됐다. 박지원 전 대표는 cbc 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를 향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당장 2명의 길에 올라선다는 것은 구상수취한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YS 추도식서 만난 안-劉 22일 서울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어제 시종 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표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동영·황주홍·윤영일 등 11명의 호남 의원이 조찬 회동을 해 주목을 끌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조찬에서 ‘상황이 이정도 됐으니 안 대표가 통합을 접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안 대표 스타일상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안 대표가 통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회동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합 찬·반 의원 수는?=중도통합 찬

성과 반대파는 찬·반의원 수를 두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호남중진 중심의 반대파는 통합찬성이 10명, 반대가 20명이라며 ‘10·20론’을 펼치며 통합반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찬성파들은 통합찬성 9명, 통합반대 9명, 연대 우선 9명, 유보 3명 등 ‘9·9·9·3론’으로 맞섰다.

이날 당의 통합에 반대하면서 일단 정책연대에는 찬성하는 의원들을 서로 자기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 같은 신경전은 전날 의회에서 정동영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전날 의회에는 36명이 참석, 30명이 발언했다. 정 의원은 “통합반대가 20명, 찬성이 10명으로 다수가 통합에 반대한다”

고 말하자 안 대표는 “굳이 나누고자 하면 9·9·9·3”이라고 말했다고 의중 참석자가 전했다. 이런 기싸움은 이날도 계속됐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cbc 라디오에 출연, “30명이 발언해서 20명은 통합논의를 중단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3분의 2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인턴부하는 데, 사실은 그 반대”라며 “연대·통합에 찬성한 의원 수를 26명이라고 이해하고, 반대표장이 분명한 11명에도 도저히 어떤 쪽인지 알 수 없는 사람 3명도 반대라고 치면 찬성 26명에 반대 14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초고소득자 증세’ 힘겨루기

소득세·법인세 논의...여 “핀셋 증세” vs 야 “경제 발목”

여야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국제기본법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핀셋과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물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부담 확대와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국민의당은 일단 복지 등 늘어나는 재원수요를 충당해야한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당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예산안 부수 법안’에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을 포함시켜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인세 처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민주 시·도당 위원장 사퇴시한 그대로

‘선거 120일 전’ 유지...전략공천 부활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 120일 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변경 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120일 전 사퇴’의 현재 규정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사퇴 시한 변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데 따른 결론으로 해석된다.

전날 간담회에서 권역별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시·도당위원장들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의 현행안과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의 변경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기획단은 또 다른 쟁점인 중앙당의 기준제정·기준의일 일부에 대한 전략공천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정신 헌법 수록 충분히 가능”

이진성 헌재소장 청문회...“개헌 통해 행정수도 이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나”는 질문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5·18에 대해서는 법률로 민주화 운동으로 보장되고 저도 당연히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관련해서는 “군이 헌법에서 정치에 관여한다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개헌특위 ‘5·18 헌법 전문 수록’ 충돌

與 “현대사의 정점 포함을”...한국당 “사회적 합의 없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개헌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22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헌법 전문과 총장, 기본권에 대해 논의한 이날 집중토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현대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헌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혜철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

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

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혁명이란 표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안은 6·10항쟁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날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사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길 36